

광주시의원들 “통합 큰 뜻 공감…졸속 안 되게 내실 다져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
통합 추진 과정 우려 해소 주문
전남도의회, 9일 이후 간담회 개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협약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올해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속도전’ 속에서 놓치기 쉬운 시민 공감 대와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민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보다 대의기관인 시·도의회의 의견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탁을 잡은 상황에서 전남도의회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6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장단, 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행부는 올해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공유했다.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오는 3월까지 특별법을 밟아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금은 통합을 실현할 골든타임”이라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통합의 당위성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심철의 의원은 “통합에 찬성하며 시너지 효과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방선거 일정을 못 박아두고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면 물리적인 시간 한계로 인해 통합 이후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합 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이나 인사 문제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들의 동의가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수정 의원은 “속도감 있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행정통합의 실질 주체인 시·도민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이에 앞서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지역 특성을 살린 실리 쟁기기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정다은 의원은 “대전·충남 사례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이나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광주·전남의 미래 머거리와 직결된 규제 완화가 특별법에 확실히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임 의원 역시 “광주·전남의 정체성이 녹아든 통합이어야 하며, 광역교통망 확충 등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제언에 깊이 공감한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협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체 구성을 확정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오는 9일 이후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통합의 ‘대의’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함에 따라, 향후 추진 과정은 속도와 내실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오찬 간담회 후 전

남도의회와 만나 행정통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이에 앞서 오는 8일 김태균 의장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민주당 시장·지사 후보들 ‘시·도 통합’ 선명성 경쟁

광주·전남 최우선 과제로 제시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예비주자들이 일제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직 단체장과 도전자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통합의 당위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각자 해법을 제시하며 대세를 이뤄가는 통합론에 가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통합 추진에 ‘속도전’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금은 지역 소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인 만큼, 유불리리를 따지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주자 없이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한다”며 통합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김 지사 또한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지금 통합을 해야 국가 정책적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으면

다음엔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광주시장 후보군은 구체적인 비전제시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주도 성장론을 선도하기 위해선 신속한 통합이 필수”라며 “서두르면 7월 출범도 충분하다”고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았다.

신정훈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자치 권한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정부 의지가 확고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 기준의 우려를 뒷고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기장 신중한 입장이었던 주칠현 의원도 “행정통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해 사실상 민주당 내 ‘통합 원팀’ 대열에 동참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 체제’에 발맞춰 국가 자원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통합을 통해 소득 수준 향상과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사 후보군들도 통합 이슈에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그동안 신중론을 꾀했던 출마예상자들도 통합 찬성으로 전회하며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다. 이개호 의원은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서두르면 7월 출범도 충분하다”고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았다.

신정훈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자치 권한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정부 의지가 확고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 기준의 우려를 뒷고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기장 신중한 입장이었던 주칠현 의원도 “행정통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해 사실상 민주당 내 ‘통합 원팀’ 대열에 동참했다.

이처럼 민주당 시장·지사 후보군 전원이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는 통합 시 청사 소재지, 재정 배분 등 구체적인 각론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대통령처럼 선제적 문제 제기하고 대안 모색해야”

김총리, 총리실 업무보고서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어떻게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을 체화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ول러 “대통령님 말씀처럼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총리실의 일에 대해 구성원들이 전제적 이해를 공유하고 확대하는 것에 (보고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총리는 지난해 말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파장’, ‘충격’을 일으켰다고 돌아보며 “공직사회에는 긴장을 가져왔고, 국민께는 정치의 주인으로서 ‘이런 것을 지켜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드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그 업무보고가 부서의 업무보고로 확산되거나 기관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김총리는 오는 14일까지 각 부처 장관이 소관하는 기관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